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혈세 날치기 이명박 독재 심판, 정당·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대강예산 등의 무효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의 손학규' 또 한번 시험대에

날치기 무효 서명 끝나는 내일부터 전국 순회 투쟁
정권 퇴진론 퇴로없는 승부수 결과따라 운명 희비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장외로 나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의지가 결연하다.

손 대표는 12일 장외투쟁 나흘째를 맞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4대강예산-날치기법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 도중인 오후 1시30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시민 등 5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과 덕수궁, 종로 일대를 돌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날치기 무효 국민걷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어 오후 3시와 8시에는 서울광장에서 '국민 혈세 날치기 MB독재 심판 정당·시민단체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각각 열고 대여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손 대표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재오 특임장관이 오후 3시께 서울광장 농성장으로 손학규 대표를 예고 없이 찾아오자 "4대강 예산·법안들을 날치기하고 무슨 낯으로 어디에 오는가.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날치기 법안을 폐기하고 오라"며 만남을 거부했다.

손 대표는 또 서명운동이 끝나는 14일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반정부·반한나라당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요 지역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손 대표는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맞서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치권 이슈가 원내 사안을 중심으로 흘러가 원외 인사로서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장외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야권의 확고한 대선 주자로서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손 대표의 의연한 태도에도 불구, 손 대표 측근들의 고민은 깊다. 손 대표가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번으로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서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의 결과는 대선 주자로서 그의 정치적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권으로부터 민주당이 얻을 수 있은 것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조력도 미미하다. 서명운동과 집회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원직 총사퇴 등 보다 강경한 투쟁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 대표 '홀로 투쟁'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따라서 손 대표의 현 장외투쟁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4대강 예산 저지 실패로 이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장외투쟁 역시 '빈손'으로 끝날 경우 당내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 안팎 경쟁자들의 반격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외투쟁이라는 강수가 대표 취임 후 수직 상승했다 다시 한 자릿대로 하락한 지지율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를 놓고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한 측근 인사는 "손 대표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그동안 정치 행보처럼 '묵묵히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서민·복지예산 '2라운드 공방'

"일방적 정치 공세" VS "실세 예산에 희생"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폭력 사태 등 정면 충돌했던 여야가 서민, 복지 부문 예산을 놓고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실세 예산'은 챙기면서도 서민, 복지 예산은 외면했다며 총공세를 벌이는 반면 한나라당은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 복지 예산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필수예방접종 예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양육수당 예산 등이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이번 예산에서 제외됐고, 필수예방접종 예산의 경우 무료접종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양육수당 예산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70%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285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 400억원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로 단 한 푼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 일부 실세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위해 서민, 복지 예산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에 대해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제 위기에 따른 결식아동 증가로 2009년과 2010년 지자체의 아동 급식비 추가 소요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온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내년 교육재정 교부금이 48조4335억원에 달하고, 지자체도 준비할 시간과 재정 여력이 확보된 만큼 당 차원에서 계속 점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필수예방접종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국 254개 지역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민간병원에서의 무료 접종까지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양육수당 70% 확대 예산 미반영과 관련해서는 연평도 도발로 국방비에 5000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다음해로 이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 12개 민생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130억원 증액됐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서민 영유아 교육보조비 지원 현실화 사업 등 5조 6506억원의 서민예산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日총리 "한반도 자위대파견 검토" 발언 논란

납북 피해자 구출 명분 "현실성 없는 발언" 비판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등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측과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또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북(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11일 낮 일본 취재진에 "자위대 수송기 등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데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한국과 사이에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상담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간 총리의 발언은)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정의화·이주영·송광호 윤리위 제소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 부의장과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각각 제소했다.

민주당은 12일 정 부의장이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 없이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했고, 이 위원장의 경우 예결위 회의 일시·장소 등의 임의 변경을 통해 야당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채 예산안을 처리해 각각 국회법 155조가 규정한 직무수행의 공평·성실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토해양위 회의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 92건에 달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한 박희태 국회의장 등도 제소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흥길 정책위의장 '예산안 파동' 책임 사퇴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 예산 등 민생 및 당 공약에 관계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일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사퇴시켰다.

고 정책위의장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책(呵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템플스테이 예산과 관련, "문방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듯이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다가 일부만 반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다른 항목에 대해선 일부 빠진 예산이 있지만 전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나 부담금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4대강 예산·친수법 날치기는 국민 우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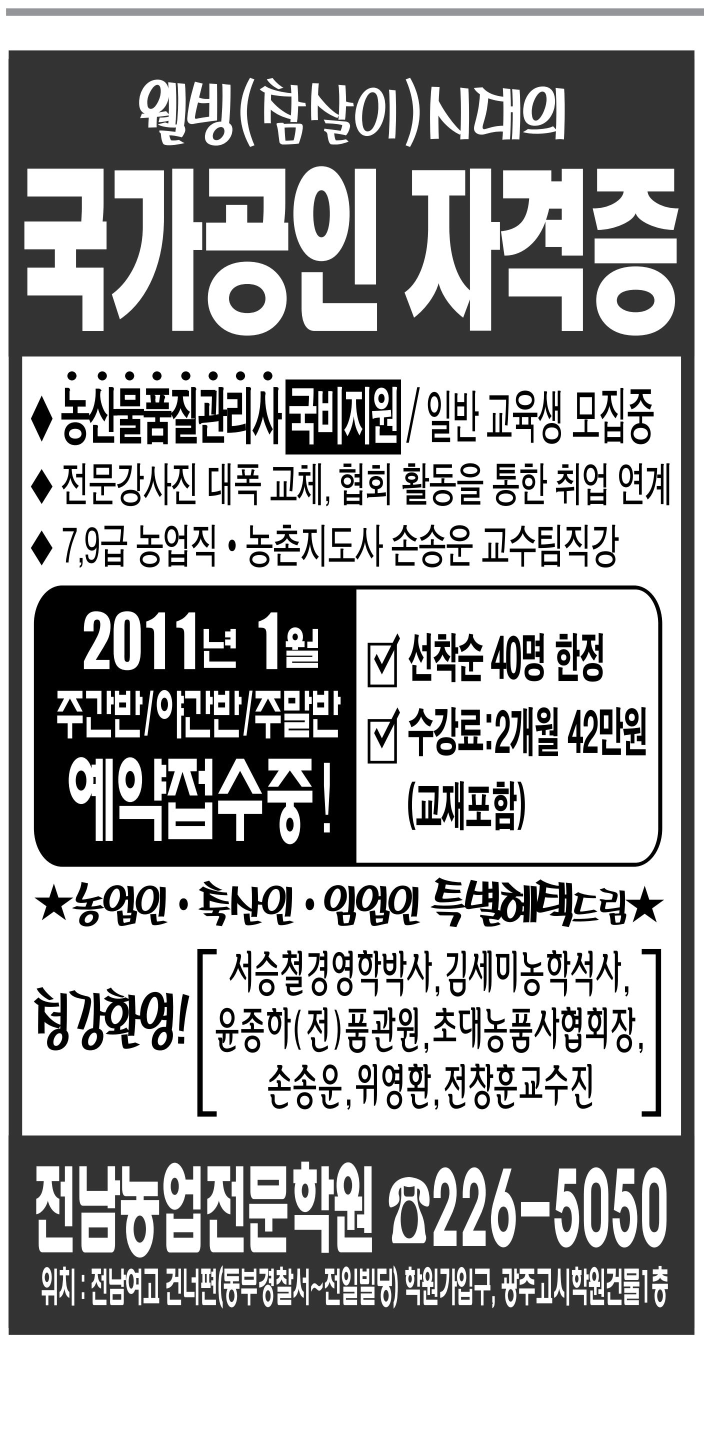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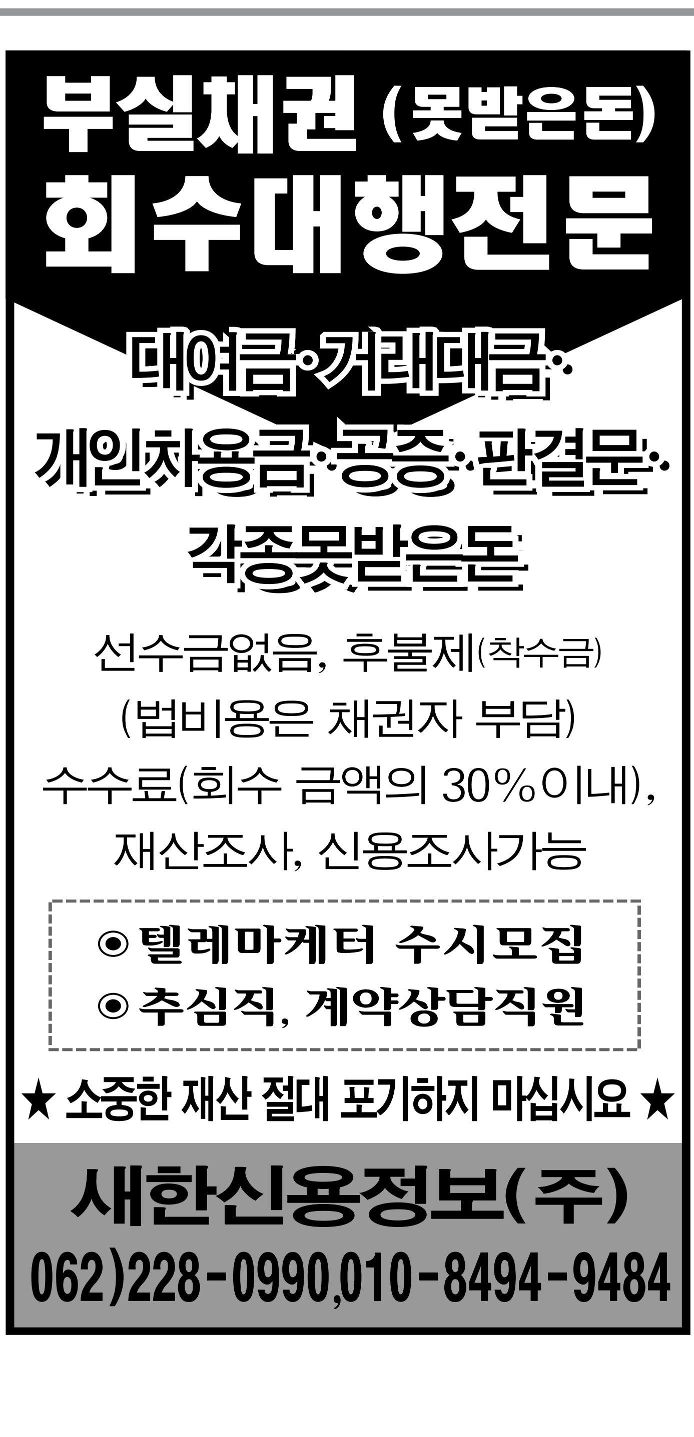
광주시의회 특위

광주시의회 4대강 사업 특별위원회와 4대강 사업중단 광주·전남공동행동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내년도 4대강 예산과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을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민심을 거스른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4대 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친수법은 운하용 수로를 만들고 주변을 개발할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를 보존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벌금 100만원 형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53)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